

노무현 정권은 약속을 지켜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유 환 준

지금 왜 8만 5천여 우리 연기군민은 분노하는가?

국가의 정책은 모름지기 그 목적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수단에서 신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국민을 위하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가 정책은 이미 국가 정책으로서의 존재가치를 갖지 못하며 그러한 정책을 "정권의 진퇴를 걸고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정권은 그 권능에 대하여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을 어떻게 믿고 따르란 말인가?

우리 연기군은 1895년 연기군으로 명명된 뒤, 1911년에는 군청 소재지를 지금의 남면 연기리에서 조치원으로 옮겼으며, 1931년에는 조치원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교통의 요지로서 각광을 받던 우리 조치원은 당시 함께 읍으로 승격되었던 광주가 인구 140만, 대전이 인구 130만의 광역시로 성장하는 사이에도 우리는 지난 반세기를 잠자듯 도시의 성장이 멈춰 있어 연기를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아쉬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기에 현 정권에서 행정수도를 우리 연가지역에 옮기겠다고 약속 할 때 조상대로 살아온 사람의 터전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까지 작게는 지역의 발전, 크게는 국가미래의 균형성장을 위해 국가정책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분명히 우리 군민은 행정수도가 우리지역으로 옮겨온다고 할 때 어느 정파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으며 지역의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대한민국이 다함께 잘 살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는 정부의 설득을 그대로 믿었던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기에 입지선정과 함께 곧바로 이어진 각종 규제에도 큰 발전을 위한 작은 희생으로 여겨 감수하였으며 농사를 천직으로 여겼던 농민들은 어차피 어디에서나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빔을 내어 대तो를 하였다.

그러던 약속이 지금에 와서는 한낱 물거품이 되었으니 국가가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손실케 하는 작태를 보고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우리 연기 군민은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 정치권 모두에게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당초 약속을 그대로 지켜라!

언제 우리 연기군민을 위해 행정수도를 옮기려 하였는가?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중차대한 정책이 몇 명의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취소될 수는 없으며 법리적 해석 또한 과정과 절차에 대한 지적이었지 정책내용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았는가?

부당한 정책이 아니라면 절차를 고쳐서라도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라.

둘째, 후보지 2천 만평을 국가에서 즉각 매입해서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실증적으로 보여라!

정치권에서는 행정 특별시, 행정 도시 등 대안들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군민들의 민심을 호도하려는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때이며, 정부에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실제 행동으로 보여라.

셋째, 우리 연기군민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라! 사인간에도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하물며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현장에 직접 나와 피해사실을 모두 조사하고 그에 걸맞는 충분한 배상을 하라.

국민을 무섭게 여기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 연기국민은 이러한 세 가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 질 때 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며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더 이상 우롱 당하거나 노리갯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사랑하는 연기군민들이여!

이제라도 분연히 일어나 우리 스스로 우리 재산을 보호하자.

자손만대로 이어질 우리 권리를 우리 스스로 찾아나가자!

